



담뱃세 증세 논란

이창우 연구위원

요약

■ 금년 3월 6일 담뱃값을 2,500원에서 4,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각 정부부처별 이견과 여론의 찬반대립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. 담뱃세에 대한 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동 법률안을 판단해볼 때 동법률안은 세수의 일부를 저소득층에게 지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담뱃세의 소득역진성을 완화할 것으로 볼 수 있으나, 소득계층별 담배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담뱃세가 초래할 소득역진성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움.

■ 2013년 3월 6일 담뱃값을 2,500원에서 4,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음(「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발의안」,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).

●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,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등의 찬반 의견과 흡연자들의 반발 등으로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.

■ 전통적으로 담배소비에 대한 세금부과는 담배수요가 다른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세수를 확대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시행되어 왔음.

● 하지만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면서 많은 국가에서 담배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담배소비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.

- 미국, 캐나다 등에서는 80년대 초부터 세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 세수확대와 담배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달성하였음(Sweanor and Martial 1994).

■ 법률안 개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담뱃값의 상승으로 인한 수요억제효과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큰 이견은 없음.

■ 담뱃세 부과에 대한 논란은 주로 담뱃세 부과의 공평성 기준 때문에 일어나고 있음.

- 담뱃세는 수직적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소득역진적인(regressive) 특성을 가지고 있음.
 -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계층에서 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담뱃세의 부과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킴.
- 해외 선행연구는 담뱃세의 소득 역진성이 생각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.
 - 미국의 의회예산국(CBO)의 연구는 담배에 대한 지출이 소득에 비례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함.
 - 이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흡연강도가 강해지며 비싼 담배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함.
 - Townsend 외의 연구(1994)는 영국의 경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담배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더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, Farrelly 외(1998)의 연구도 미국에서 같은 결과를 도출함.
- 한편, 담뱃세와 관련된 연구들은 담뱃세의 소득역진성의 과소와는 별개로 일반적인 세금정책의 목표인 과세의 누진성(progressive)에 초점을 두고, 담뱃세의 세수 중 일정부분을 저소득층을 위해 지출되도록 설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.

■ 상기 해외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법률안을 평가해본다면, 동 법률안은 세수의 일부를 저소득층을 위해 지출하도록 명시한다는 점에서 담뱃세의 소득역진성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, 소득계층별 담배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 제시가 빈약하여 실제로 담뱃세가 초래할 소득역진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움.

- 「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 제25조제2항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시 특별지원대상에 저소득층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어, 담뱃세 부과에 따른 소득역진성을 완화하려 하고 있음.
- 하지만 담배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만 제시하고 있을 뿐 소득계층별 수요탄력성 혹은 담배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담뱃세의 소득역진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움.
- 또한 담뱃세의 세수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지원금으로 지출될 경우 결국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흡연자가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국 흡연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. [kiri](#)